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4
년
1
0
월
9
일
(
수
)
·
주
간
제
4
1
호
·
통
권

제
1
6
9
6
호
·
중
소
기
업

취
업
자

소
득
세

감
면
제
도

안
내

구
독
료

월
3
0
0
0
0
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10/ 9 통권 1696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의 Key !
- 새나는 부가가치세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점검사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배송 대행용역 제공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기업중여공제혜택과 기업상속공제적용 가능 업종 판단〉

관련 업종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
농업, 임업, 어업	기업용 자산 중(토지 + 건물)가액이 50% 미만인 경우	50% 초과되면 해당 안됨
광업 분야	전체 해당됨	없음
제조업	전체 해당 + 위탁제조업도 해당	자기 명의의 제조 아닌 단순 위탁제조 의뢰
건설업	전체 해당	없음
도매·소매업	전체 해당	없음
음식·숙박업	음식점업만 해당	숙박업 비해당, 주점업·음료점업 비해당 (커피전문점도 해당안됨)
정보통신	출판, 영상 제작 배급업, 방송,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서비스	비디오 감상실 운영 비해당
기술서비스	연구개발업, 광고·시장조사 등, 과학기술서비스, 전문 디자인	전문서비스업 제외 (법률,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 안됨)
임대업	무형재산 임대 등	부동산은 제외됨
교육서비스	유아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비인가는 제외
예술, 스포츠, 여가	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96호 / 주간 41호

2024. 10. 9.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가업증여공제혜택과 가업상속공제적용 가능 업종 판단	표지
CEO의 경영산책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의 Key!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특수관계법인의 무상거래, 견본품 지급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문의	5
	- 현금보상금에 대한 증빙	
	- 외국인 강사 원천징수	6
	- 금융보증부채 질의 건	
눈에맞는 절세미인	새나가는 부가가치세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점검사항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상속세 자녀공제액 상향 효과	9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10
직장인Survival	근접성과 설득효과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됨 (사전법규부가-197, 2024.04.25)	12
	-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 가 있는 것임 (서면상속증여-81, 2023.12.13)	13
세정뉴스와해설	가업상속공제 공제액 2.4배 폭증... '부의 세습' 전면 재검토해야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역 제공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12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15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34
경영정보	-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 정환율	4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의 Key!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CEO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우리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
- 앞으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에 미칠 중요 리스크는 무엇인가?
- 우리 기업의 어떤 리스크가 경쟁 우위로 연결될 수 있을까?
- 우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시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는가?
- 우리 기업의 임직원의 리스크 마인드(mindset)와 리스크 문화는 몇 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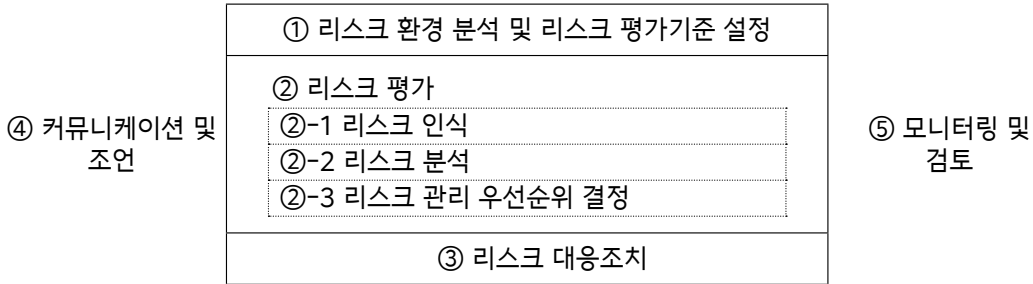
◆ 리스크 관리의 의미

리스크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CEO는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영자는 직무별로 목표를 인식하고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리스크를 식별한다. 식별된 리스크가 중요성이 높은 것인지 아닌지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한다. 즉 조직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통제활동)를 취하여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라고 한다.

◆ 리스크 관리의 절차: AS/NZS 4360

리스크 관리의 열매는 조직의 '목표 달성'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리스크 관리 절차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의 COSO, 호주의 Standards Australia 등이다. 리스크 관리의 원조격인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안내서」(Risk Management Guidelines, Companion to AS/NZS4360:2004)에 리스크 관리 절차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다. 동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만들어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리스크 관리 절차(ISO31000:2018-Risk Management Guidelines)는 대체로 동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주/뉴질랜드 정부가 제정한 리스크 관리 절차는 <그림1>과 같다.

<그림1>리스크 관리 절차



CEO의 경영에 도움이 될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리스크 환경 분석 및 리스크 정책 설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조직이 처한 리스크 환경을 분석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리스크 관리에 적용할 리스크 정책 및 조직 등을 설정하게 된다.

② 리스크 평가:

리스크 평가는 다음과 같이 리스크 인식, 리스크 분석,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 결정으로 구성된다.

- 각 리스크 관리자는 리스크 환경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리스크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에는 조직의 경영전략과 관련된 전략적, 재무리스크도 있고 실무자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운영 리스크, 화재 등 재난 리스크도 있다. (②-1 리스크 인식)
- 리스크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와 이들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리스크 점수를 산출한다. (②-2, 리스크 분석)
- 어떤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즉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3,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 결정)

③ 리스크 대응조치:

리스크 관리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면 그에 따라 리스크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리스크 점수가 일정한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목표수준 이내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리스크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 수행하는 것이다.

④ 커뮤니케이션 및 조언: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한 리스크를 도출하기 전략적 벤치마킹과 더불어 영업 현장 책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리스크 대응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

기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 리스크 전문가들과의 의견과 조언이 필수적이다.

⑤ 모니터링 및 검토 :
리스크 관리 사이클이 원활히 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리스크 관리 주체인 CEO를 비롯한 임직원이 리스크 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만 리스크 관리는 성공할 수 있다.
기업이 처음으로 리스크 관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통해 리스크 관리 위치(성숙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층과 직원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수준, 조직에 내재된 리스크의 종류와 심각성, 리스크 통제활동 수준 등을 조사한 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설정한다.
성숙도가 낮은 경우 CEO와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27일 (금)	9월 30일 (월)	10월 2일 (수)					
미	달	러	(USD)	1329.70	1319.60	1306.90					
일	본	엔	(JPY)	917.29	924.51	910.26					
영	국	파	운	드	(GBP)	1783.46	1765.56	1735.37			
캐	나	다	달	러	(CAD)	987.19	976.58	968.40			
홍	콩	달	러	(HKD)	170.94	169.76	168.14				
중	국	원	(CNH)	189.42	188.74	186.86					
유	로	화	(EUR)	1486.01	1474.06	1446.15					
호	주	달	러	(AUD)	917.36	912.44	899.47				
싱	가	폴	달	러	(SGD)	1036.08	1030.37	1014.6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0.80	319.90	313.82

특수관계법인의 무상거래, 견본품 지급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문의

Q 특수관계법인인 해외업체에 견본품(샘플)을 3백만원 정도 직추출하고 '무상거래'로 면장 신고하였습니다.

국내거래일경우에 견본품 무상거래는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해외 특수관계 법인도 무상거래, 견본품 지급일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하지않아도 상관없는지요?

A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보상금에 대한 증빙

Q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화장실 물기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병원비 및 피해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을 요구합니다.

현금을 지급 하고 장부에 기록 할 때, 반드시 증빙자료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A 피해보상금 지급시 해당 고객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여 거래내역을 남겨놓고 관련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추시면 됩니다.

외국인 강사 원천징수

Q 당사는 직원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주자와 비 거주자일 경우 각각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시면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되지만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여부에 따라 국내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상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금형 제작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 Q** 다자간 무역거래 관련입니다.
A(국내) → B(국내) → C(국내) → D(국외)
B는 C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A로부터 물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B는 A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 한 후, 금형 비용을 지급하고 A의 공장에 놓을 예정입니다. (B의소유) A는 동 금형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B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의) 물품 공급시 A와 B는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인데, 금형의 경우 B는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A** 귀사(B)가 수출업자인 C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금형을 제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융보증부채 질의 건

- Q** 계열사 간 대출 담보 제공의 건이 발생하였는데, 금융보증부채를 잡아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계열사에서 @@억원을 대출하면서 B계열사에서 지급 보증을, 저희 회사에서 @억원의 예금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A계열사에게 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A계열사에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시 담보는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보 제공 시에도 금융보증부채를 잡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담보제공에 의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금융보증부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새나가는 부가가치세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점검사항

상담실 백종훈 차장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절세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다. 신고와 관련된 세법을 잘 숙지하여 신고시에 누락시키거나 간과하지 않고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외로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몰라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세금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새나가는 세금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신고시 전기요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겸용서식도 포함해야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산서(영수증)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임을 기재하여야 함)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영수증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전기요금영수증 등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잘 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에 따른 발행세액공제 적용받기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시에 잊지 말고 반드시 발행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신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있는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의 현금영수증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한다.

휴업기간에 지출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도 공제가능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서면3팀-2893, 06.11.22)

따라서 휴업 중에 교부받은 사업관련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아 세부담을 줄여야겠다.

납부의무면제자인지를 확인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 납부의무면제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을 납부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납부의무면제자는 당해 과세기간 신규, 휴·폐업자인 경우에는 6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드시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되는데, 이를 신고누락하여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다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별도의 확인작업이 없어도 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상속세 자녀공제액 상향 효과

	현행	개정안	차이
상속재산	25억		-
공제액	10억	17억	+7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자녀공제 10억 기초공제 2억 배우자공제 5억	
상속세액	4억4000만	1억7000만	-2억7000만

※ (단위 : 원) 상속재산 25억, 배우자 1명+자녀2명일 경우



월 배당 ETF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일반 계좌	연금계좌	
배당소득	소득구분	연금소득
15.4%	원천징수 세율	3.3~5.5%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종합과세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납세자가 희망하면 16.5%의 단일 세율 적용 가능
부과	지역건강보험료	미부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정책명	현행	개선	시행일자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통장 금리 2.0%~2.8%	청약통장 금리 2.3%~3.1% (최대 3%대 금리)	9.23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허용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 에만 청약 가능 (청약 예·부금: 민영주택, 청약저 축: 공공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 용하되,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 인정	10.1(당행), 11.1(타행)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부하 여도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83년~)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 향하되,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 하여 재납입 가능	11.1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 불가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금 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가 능 등)	2.2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 병 내일준비적금 일시납(최대 5 천만원) 연계	9.23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 대 2년	최대 5년으로 확대	7.1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 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천 선 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 자로 선정	3.25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 주로 한정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 원대상 확대	'25년



근접성과 설득효과

설득자가 근처에 살고 있으면 '이웃 의식' 비슷한 것이 생겨 설득자의 말을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좀더 지리적으로 가까운 종로나 신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비즈니스 관리학과의 문 박사는 참가자들은 실험 협력자가 자신의 집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쉽게 설득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혀냈다. 같은 것을 설득하는데도 상대가 자신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그 내용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가끔 일 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 자신과 동향이거나 하면 그것만으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따뜻해지는데, 이것이 '근접성의 원리'다.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 사람과 이야기할 때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나와 보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안락감이 설득효과를 높이는 셈이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역 제공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
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
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
세율 적용됨

사전법규부가-197, 2024.04.25

■ 질 의

- 주식회사 AAA(이하 "신청법인")는 국내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써
 - 국내소비자가 해외로 보내는 물품 품목 및 국가를 고려하여 해외운송업자(BBB, CCC 등)와 계약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 국내에서 국내소비자가 원하는 해외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운송비 상당액+수수료)를 수취함
-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배송 뿐 아니라 별도의 포장센터를 두고 포장서비스, 픽업서비스(일정무게 이상), 송장대행 작성서비스를 제공함

질의

-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해외배송을 의뢰받아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음

사전법규국조-254, 2024.04.30

■ 질 의

- 당초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다가,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 받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쟁점규정’)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상속증여-81, 2023.12.13

■ 질 의

- 조합 소유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61, 2009.0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서면법규법인-2950, 2024.01.19

■ 질 의

- 코리아시큐리티홀딩스(이하 "질의법인", "연결모

법인", 또는 "모회사")는 자회사와 손회사를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2023.1.1.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고 있음

- 자회사는 2024.12.3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질의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이며(이하 "본 건 합병"),
 - 연결모법인인 질의법인은 2024.12.31.에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임
-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결납세 적용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결손금(이하 "쟁점 결손금")을 연결자법인들 소득금액과 공제 예정임
- 계속적인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위해 2025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연결모법인(종전 자회사)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할 예정임

질의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들의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모법인이 자법인을 완전지배하고 그 자법인이 다시 손법인을 완전지배함에 따라 3개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중 자법인이 모법인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의 결손금에서 공제되었던 자법인과 손법인의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기업상속공제 공제액 2.4배 폭증… ‘부의 세습’ 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기업 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기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제한도는 이전에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

기업상속공제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내야 할 상속세를 국가가 상당수 부담하는 대신 업종과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내에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중대형 기업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오로지 세습만을 목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면서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공제 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기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려 한다”라며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계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 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잘못 거뒀다가 돌려준 세금, 8조 돌파… 정교한 과세 필요

지난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 상당수가 경정, 소송에 가지 않고 행정단계(심판 등 재결절차)에서 수정된 만큼 과세행정에 빈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받은 국

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은 8조 1495억원으로 2022년(5조6838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경정청구 환급은 4조9565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은 2조1243억원, 직권경정은 3590억원에 달했다. 착오이종납부 환급은 709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큰 대기업 사건에서 이어질 때 숫자가 크게 튀게 된다.

민병덕 의원은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꼼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어이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올해 64.9조원… 가상자산 급락 영향

올해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신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62명(8.5%) 줄었으나, 신고금액은 121.5조원(65.2%) 대폭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된 특정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30.8조원 신고됐던 가상자산 계좌는 올해 10.4조원으로 전년 대비 92%나 줄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나머지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신고액의 54.5조원으로 지난해(55.6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할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국세청, 2024. 9 -

I 개 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법령개정 및 해석 등의 설명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

- '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감면대상 업종의 추가(컴퓨터 학원) 및 감면적용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 근로자 및 업무 담당 직원이 감면 신청 및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 및 응답 사례를 보완·추가하였으며,
 - 일부 내용의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하여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추가하였습니다.(현재 미확정 → 연말 국회통과 예정)
-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II

제도 연혁

■ 연도별 주요 개정사항*

개정일	감면 내용	대상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1. 12. 31. (신설)	3년간 100%	청년(15~29세)	'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4. 1. 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 12. 15.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6. 12. 20.	-	경력단절여성 추가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8. 5. 29.	5년간 90%	청년(15~34세)	'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19. 1. 1.	-	장애인범위 확대	'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20. 1. 1.	대상업종 확대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결혼, 자녀교육 사유 추가 · 퇴직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22. 1. 1.	-	경력단절여성 인정기간 요건 완화 · 퇴직후 2~15년 이내 동 종업종 취업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22.12.31.	한도 200만원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23.12.31.	대상업종 추가 *컴퓨터학원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23.1.1.~'26.12.31.	90%	200만원
	'18.1.1.~'23.12.31.	90%	150만원
	'16.1.1.~'17.12.31.	70% ('18년 이후 90%)	150만원

청년	'14.1.1.~'15.12.31.	5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12.1.1.~'13.12.31.	10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60세 이상자 ·장애인	'23.1.1.~'26.12.31.	70%	200만원
	'16.1.1.~'23.12.31.	70%	150만원
	'14.1.1.~'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23.1.1.~'26.12.31.	70%	200만원
	'17.1.1.~'23.12.31.	70%	150만원

* 세법개정으로 감면적용기간은 2026.12.31.까지 연장

III 감면 요건

■ 감면 대상자

구분	요 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 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등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민주유공자유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 수관계인이 아닐 것			

* 청년이 병역이행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취업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함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예시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이행 병역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연령계산 시 병역대체 복무기간을 빼지 않음

2024년 세법 개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제도

-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 조특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 ①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② 퇴직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표준산업 중분류)의 기업에 취직할 것
 - ③ 결혼·임신·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④ 퇴직 후 2~15년 이내일 것

● 개정 내용

- (경력단절남성 지원)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은 남녀 공통의 문제로 맞벌이 보편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남성도 지원
- (업종제한 폐지) 경력단절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일업종(표준산업중분류) 재취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추가) 장애자녀 양육시 연령제한(8세)을 적용하지 않고,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

* 적용시기 : '25.1.1.이후 채용·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않는 경우 제외

■ 감면적용 배제

-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경력단절 여성 제외)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
-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한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①에 따라 공정위가 지정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구 분	업 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컴퓨터 학원 포함)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유예제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시행일: '24.8.21.)

※ 유예제외 사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경우
- ③ 법 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조세법 시행령」 제2조
업종	○ 모든 업종	○ 소비서비스업(주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주업종	○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규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 매출액 자산총액 5천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독립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 (별표1)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 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IV 사후 관리

■ 감면 신청 점검

-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면신청 근로자 명단 중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인하여 적게 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합니다.

■ 감면세액 계산

-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frac{\text{종합소득}}{\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을}$$

* '16년 이후 취업자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



-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times \left[1 - \left(\frac{\text{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text{산출세액}} \right) \right]$$

V

계산사례

-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p>사례 1</p>	<p>2023년도 4월에 취업(전근무지 감면 제외 대상)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p> <p>① 2022년 총급여 50,000,000원(종전근무지 급여 포함)</p> <p>②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원(감면 신청)</p> <p>③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원(감면 제외 대상)</p> <p>④ 산출세액 3,802,500원</p> <p>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p>
	<p>⇒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368,900원</p> $3,802,500 \times \frac{20,000,000}{50,000,000} \times 90\% = 1,368,900$ <p>※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p> <p>⇒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422,400원</p> $660,000 \times \left(1 - \frac{1,368,900}{3,802,500} \right) = 422,400$ <p>※ $\frac{\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text{산출세액}} \times \left(1 - \frac{\text{감면액}}{\text{산출세액}} \right)$</p>

■ 감면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사례 2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2년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① 2023년 총급여 50,000,000원
	② 산출세액 3,802,500원
	③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2,000,000원	
$3,802,500 \times \frac{50,000,000}{50,000,000} \times 90\% = 3,422,250 \text{이나, 한도액 } 2,000,000 \text{원 적용}$	
$\text{※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312,859원	
$660,000 \times \left(1 - \frac{2,000,000}{3,802,500}\right) = 312,859$	
$\text{※} \quad \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times \left(1 - \frac{\text{감면액}}{\text{산출세액}}\right)$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원)

구 분	청년 감면	경력단절여성 감면	감면대상 아님
감면율	90%	70%	-
① 총급여	36,000,000	36,000,000	36,000,000
② 근로소득공제	10,650,000	10,650,000	10,650,000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25,350,000	25,350,000	25,350,000
④ 인적공제 ^{주1)}	3,000,000	3,000,000	3,000,000
⑤ 국민연금보험료 ^{주2)}	1,200,000	1,200,000	1,200,000
⑥ 건강보험료 ^{주2)}	1,000,000	1,000,000	1,000,000
⑦ 과세표준 (③-④-⑤-⑥)	20,150,000	20,150,000	20,150,000
⑧ 산출세액	1,762,500	1,762,500	1,762,500
⑨ 중소기업 취업자 감 면세액	1,586,250	1,233,750	-



⑩ 근로소득세액공제 ^{주3)}	71,600	214,800	716,000
⑪ 표준세액공제	104,650	130,000	130,000
⑫ 결정세액 (⑧-⑨-⑩)	-	183,950	916,500
⑬ 기납부세액 ^{주4)}	682,200	682,200	682,200
⑭ 차가감 납부할 세액	△682,220	△498,250	234,300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부녀자 공제 미적용)

주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가정

주3) 716,000(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감면세액/산출세액)

주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고 월급여 3백만원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
56,850원 × 12월 = 682,200

VI 주요 해석

1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①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
 - ②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관련법령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27 ② 제5호)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함
- * 국민연금법 제127조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사회보장협정에 따름

■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감면 적용 배제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세령§27②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 국가 적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 ※ 사회보장협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 '연금정보'에서 조회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해당 비영리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열거된 비영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조세법§30①)

- 중소기업기본법§2①1호에는 영리기업, 2호, 3호 및 4호에서는 비영리기업 중 중기령 §3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 ※ 중기령 §3의 요건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19.12.12)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검토내용

- 조특법§30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에서 비영리기업은 중기법§2①2·3·4에서 열거된 비영리기업외의 비영리기업도 포함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특법§30①에 따라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만 규정하여도 해당 규정 2호~5호의 비영리기업은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열거된 비영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업도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합니다.

※ 비영리기업 중에서 중기법§2①2호의 사회적 기업과 제3호의 조합법인 등만을 감면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면, 굳이 단서조항으로서 ()안에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다만, 비영리기업도 중기법§3의 매출액기준, 자산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

3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2011. 12. 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 취업한 자가 A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기업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입사한 경우 A사에서 지급받은 근



4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해당 감면의 적용가능 여부

■ 사실관계

- 2017.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A에 취업한 후 2018.2.28. 결혼을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2021.10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B에 취업하는 경우,
 - “청년”의 자격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다시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법령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함(조특법 §30①후단)

- 경력단절 여성 : 조세특례제한법§29의3①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조세특례제한법§29의3①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2. 퇴직한 날부터 2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해석사례(서면 - 2021 - 법규소득 - 5836, '22.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검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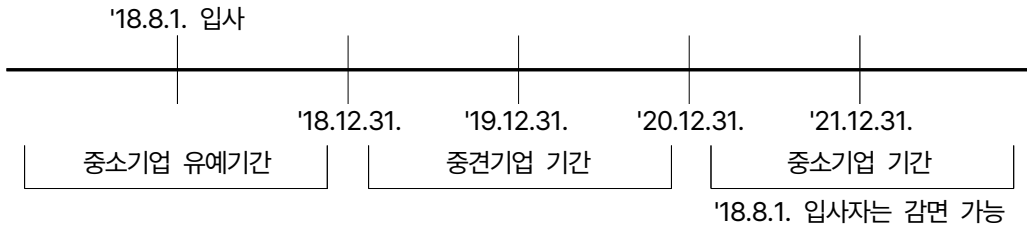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년”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 해당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결혼 등의 사유로 퇴직 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서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청년”으로서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경력단절여성”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3년간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5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가능 여부

■ 사실관계

- 해당 기업은 2018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었고, 2018년 이전에 취업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18년 이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함
 -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고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초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은 입사일로부터 5년의 기간내에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법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함(조특법 §30①)

■ 해석사례(서면-2021-법령해석소득-0697, '21.6.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해당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검토내용

-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



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이 배제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5년 기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6

본점은 도소매업이나, 지점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 사실관계

- 본·지점이 있는 사업장이고, 재무제표상 주업종은 도소매업이며, 지점사업장 중 업종이 서비스/유흥주점업으로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음
 - 이러한 경우 지점사업장이 감면 배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본점의 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함(조특령 §27③)

7. 도매 및 소매업

■ 해석사례(서면 - 2024 - 원천 - 0618, '24.05.0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7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소속 직원
들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27년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2023년 세무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유예기간 미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 적용을 받은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 제외함(중기법 §2③)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시행일: '24.8.21.)

■ 해석사례(서면-2024-원천-1456, '24.05.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검토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유예제외 사유(중기령 §9)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경우
- ③ 법 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 국세청, 2024. 9 -

□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4,957명, 64.9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5조 원(65.2%) 감소하였습니다.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명, 조 원)

구 분	총신고	예·적금	주식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24 신고인원 (금액)	4,957 (64.9)	2,767 (20.6)	1,657 (23.6)	1,043 (10.4)	253 (4.8)	84 (2.3)	543 (3.2)
'23 신고인원 (금액)	5,419 (186.4)	2,942 (22.9)	1,590 (23.4)	1,432 (130.8)	251 (5.2)	100 (2.1)	593 (2.0)

* 채권, 보험, 기타

- ▶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조 원이 신고되어 '23년(130.8조 원) 대비 120.4조 원(92%) 감소하였습니다.
- ▶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5조 원이 신고되었는데 '23년(55.6조 원) 대비 1.1조 원(2%) 감소하였습니다.
- ▶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 ▶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I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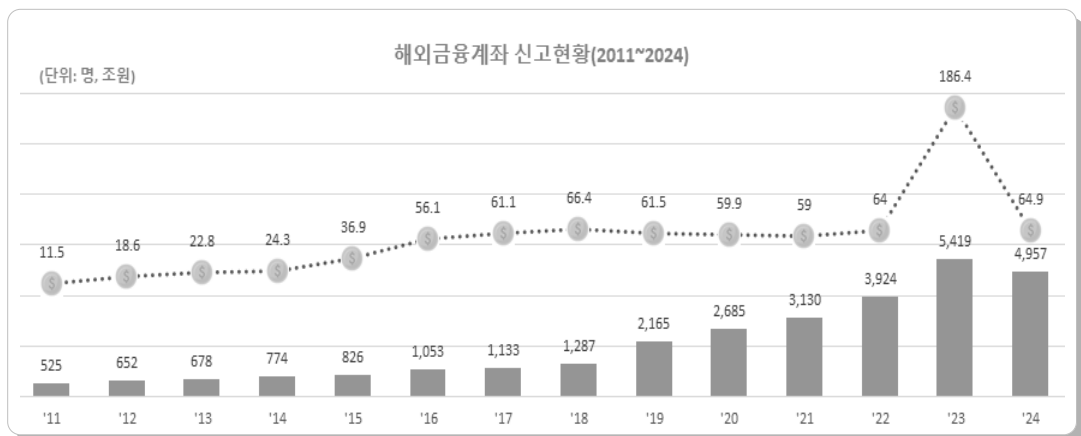
1 결과 개요

-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전년대비 8.5%) 감소하였고, 신고금액도 121.5조 원(전년대비 65.2%) 감소하였습니다.
- ▶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4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지난해 신고인원 1,432명, 신고금액 130.8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389명(전년대비 27.2%) 감소하였고, 신고금액은 120.4조 원(전년대비 92.0%)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 ▶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844%(4,432명), 신고금액은 464%(53.4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명, 개, 조 원)

구 분	'24년			'23년		
	인원(증감율)	계좌(증감율)	금액(증감율)	인원	계좌	금액
전 체	4,957 (△8.5%)	25,430 (△4.0%)	64.9 (△65.2%)	5,419	26,488	186.4
개인	4,152 (△9.0%)	13,439 (△7.9%)	16.4 (△32.5%)	4,565	14,590	24.3
법인	805 (△5.7%)	11,991 (0.8%)	48.5 (△70.1%)	854	11,898	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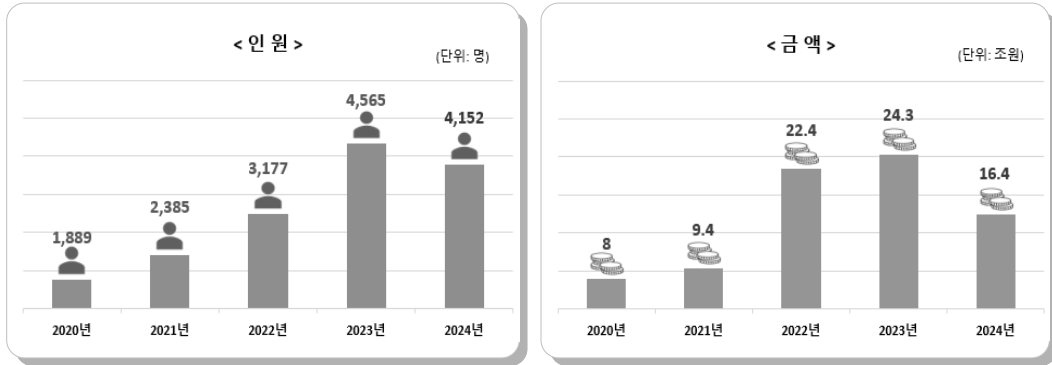


- 개인신고자는 4,152명이 16.4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565명, 신고금액



24.3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413명(전년대비 9.0%) 감소하였고, 신고금액도 7.9조 원(전년대비 3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 최근 5년간 개인신고자 신고 추이 】



- ▶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261.6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1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1배 큰 수준입니다.

【 '24년 개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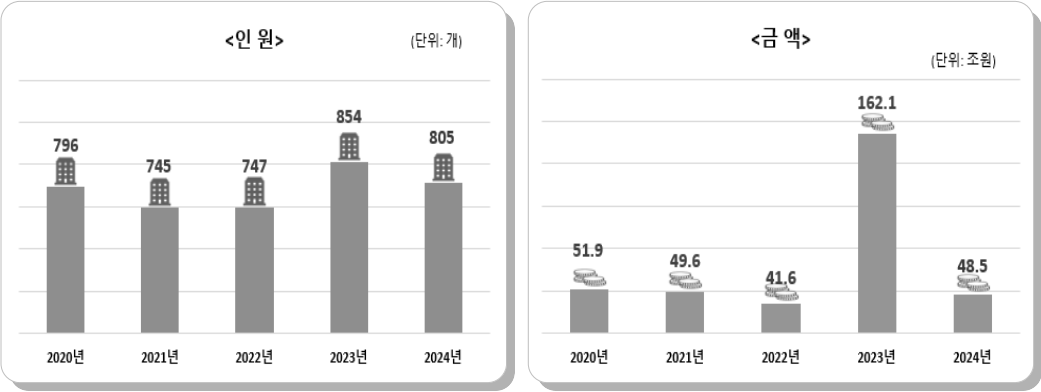
(원,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인당 평균 신고금액
0~10%	10조 8,814억	66.4	416명	261.6억
10~20%	1조 6,475억	10.0	415명	39.7억
20~30%	1조 87억	6.2	415명	24.3억
30~40%	7,236억	4.4	415명	17.4억
40~50%	5,543억	3.4	415명	13.4억
50~60%	4,448억	2.7	416명	10.7억
60~70%	3,650억	2.2	415명	8.8억
70~80%	3,056억	1.9	415명	7.4억
80~90%	2,586억	1.6	415명	6.2억
90~100%	2,101억	1.3	415명	5.1억
합 계	16조 3,994억	100.0	4,152명	39.5억

□ 법인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5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54개 법인, 신고금액 162.1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9개 법인(전년대비 5.7%) 감소하였고, 신고

금액은 113.6조 원(전년대비 70.1%)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법인신고자 신고 추이 】



- ▶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5,301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8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91배 큰 수준입니다.

【 '24년 법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원,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개당 평균 신고금액
0~10%	42조 9,356억	88.5	81개	5,300.7억
10~20%	2조 9,027억	6.0	80개	362.8억
20~30%	1조 1,084억	2.3	81개	136.8억
30~40%	5,914억	1.2	80개	73.9억
40~50%	3,588억	0.7	81개	44.3억
50~60%	2,273억	0.5	80개	28.4억
60~70%	1,516억	0.3	81개	18.7억
70~80%	1,041억	0.2	80개	13억
80~90%	727억	0.1	81개	9억
90~100%	463억	0.1	80개	5.8억
합 계	48조 4,989억	100.0	805개	602.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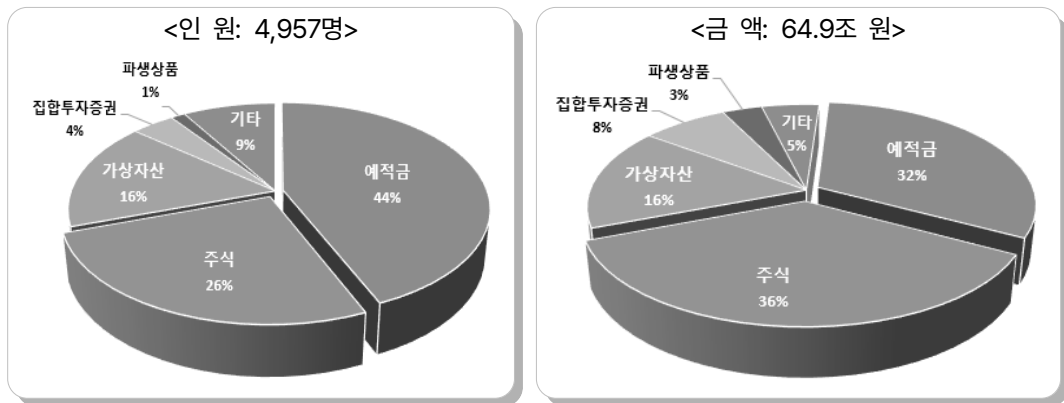


2 신고자산별 분석

□ ('24년 신고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4,957명) 기준으로 ① 예·적금(2,767명), ② 주식(1,657명), ③ 가상자산(1,043명), 신고금액(총 64.9조 원) 기준 ① 주식(23.6조 원), ② 예·적금(20.6조 원), ③ 가상자산(10.4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 ▶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3명이 총 10.4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3년(1,432명, 130.8조 원) 대비 389명, 120.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금액(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하여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하였고,
 -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되었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하여 신고금액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 계좌 등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1.1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 대비 2.7조 원 감소하였으나 주식, 파생상품 계좌 등 신고금액은 1.6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24년 신고자산별 신고현황 】



【 '23~'24년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명, 개, 조 원)

연 도	구 분	전체 (순인원)	가상 자산	가상자산 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예·적금	주식	집합 투자증권	파생 상품	기타	
'24	신고 인원	전체	4,957	1,043	2,767	1,657	253	84	543
		개인	4,152	996	2,052	1,576	226	60	491
		법인	805	47	715	81	27	24	52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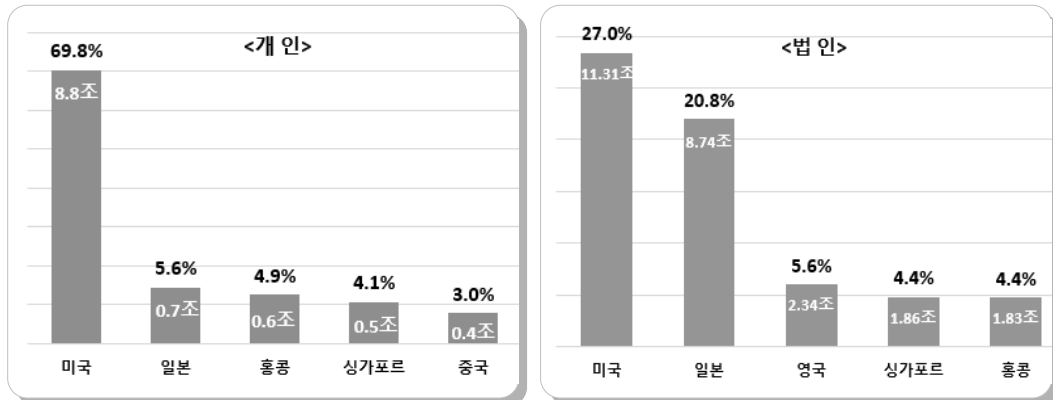
	신고 금액	전체	64.9	10.4	20.6	23.6	4.8	2.3	3.2
		개인	16.4	3.9	3.7	5.4	1.1	1.0	1.3
		법인	48.5	6.5	16.9	18.2	3.7	1.3	1.9
'23	신고 인원	전체	5,419	1,432	2,942	1,590	251	100	593
		개인	4,565	1,359	2,192	1,510	225	66	541
		법인	854	73	750	80	26	34	52
	신고 금액	전체	186.4	130.8	22.9	23.4	5.2	2.1	2.0
		개인	24.3	10.4	5.0	5.2	1.4	0.8	1.5
		법인	162.1	120.4	17.9	18.2	3.8	1.4	0.4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 ('24년 신고 결과)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나 모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여 국가별 분포 분석이 어려움

【 신고자산 보유 상위 5개국 신고금액 】



▶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신고내용 연령대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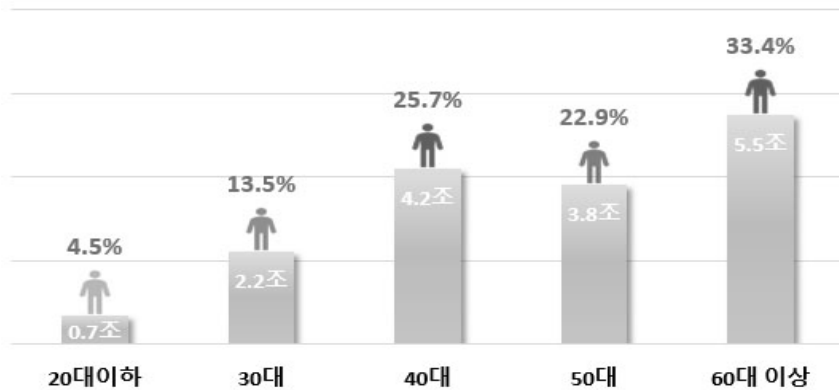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9.3%), ② 60대 이상(29.0%), ③ 40대(23.0%) 순으로 높았습니다.
- ▶ 신고금액 비율은 ① 60대 이상(33.4%), ② 40대(25.7%), ③ 50대(2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20대 이하(49.0억 원), ② 60대 이상(45.6억 원), ③ 40대(44.0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4년 연령대별 전체 신고자 신고현황 】

(원, %)

구분	신고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20대 이하	151명	3.6	7,396억	4.5	49.0억
30대	623명	15.0	2조 2,158억	13.5	35.6억
40대	957명	23.0	4조 2,111억	25.7	44.0억
50대	1,218명	29.3	3조 7,520억	22.9	30.8억
60대 이상	1,203명	29.0	5조 4,810억	33.4	45.6억
합 계	4,152명	100.0	16조 3,994억	100.0	39.4억

<연령대별 해외금융계좌 보유 분포도>



II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은 '23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명,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인 원	711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92	74
부과액	2,408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236	251

- ▶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 국세청은 '23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2명을 범칙처분 (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으며,
- 금년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 】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범칙처분	102	-	-	1	7	18	12	11	14	18	12	9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	-	-

III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 올해 신고기한('24.7.1.)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수정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IV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V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붙임 1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 ▶ (신고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 ▶ (신고대상 계좌)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 (신고대상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 ▶ (신고대상 정보)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 ▶ (과 태 료) 미·과소 신고금액의 20% 이하 과태료(2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20% 과태료
 - *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④)
- ▶ (명단공개)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 ▶ (벌칙처분)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붙임 2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3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

- 금융위원회, 2024. 9 -

- 주요 내용 -

- ◆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추진
 -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 마련
- ◆ 시행세칙은 금일부터 10.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개시 예정
 -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 ◆ 향후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

※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개요

-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24.3.26., 관계기관 합동)” 등 반영 사항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 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既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일부터 10.1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 (12월초 시행 목표)

* finlife.fss.or.kr

**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중

II. 추진 배경

-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

-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상품별 특성[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이 다양하여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

* ’23년 “찾아가는 현장소통반”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시간과 수단의 제약으로 인해 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 되어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

-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

III. 주요 개정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

품” 추가 반영

-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 마련

□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 등 신설

-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 마련

<참 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성(안)

◆ 개인사업자 비교공시 시스템은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과 동일하게

①검색화면 및 ②결과화면으로 구성 예정

① (검색화면) 개인사업자 본인의 상황 및 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조건별 선택지 제시

[참 고] 주요 검색요건 및 선택지(안)

검색요건	선택지
자금용도	일반, 창업, 대환, 재기
가입대상	청년, 여성, 장애인, 온라인셀러*, 저신용자, 전문직, 기타
담보·보증여부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임의상환
권역구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모집인, 전화, 기타

*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24.5.30일 보도자료 배포) 심의 결과 반영

② (결과화면) 검색화면에서 선택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상품별 정보 제시

- 주요 상품정보에서는 각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 주요 정보를 제시하고, 정렬기능을 통해 한눈에 대출상품간 비교 가능
- 또한, 상세정보 버튼을 제공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정보 및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으로의 링크(URL) 제시

[참 고] 결과화면 예시

주요 상품정보					상세정보
금융회사	상품구분	자금용도	담보여부	금리방식	상세정보 ▼
△△은행	일반	창업	담보부	변동금리	
상품명	상환방식	최저금리	최고금리	전월평균	
OO 개인사업자대출	원금분할 상환	X.XX%	X.XX%	X.XX%	



IV.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되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말 개시 예정
 -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

※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 법규 정보 → 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